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10월 6일(수)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도서지원과	담 당 자	•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032-440-505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해양환경팀장 홍성훈	☎032-440-4891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 수생태보전과 진명호	☎044-201-7040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 담 당 자 이재경	☎044-201-7052
			•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02-2133-3750
			•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02-2133-3765
보 도 일 시		10월 6일 12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 위해
인천시,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함께 힘 모은다.
 -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시·도 분담금 증액 합의 -
 - 인천앞바다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체결 -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상과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시장 이재명)와 함께 오는 10월 15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

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앞바다는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강 기인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어업생산성 저하·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피해와 책임을 공감하고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함께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한강수계 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액해 매년 85억 원씩 5년 간 425억 원을 편성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58억 원 중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50.2%, 서울특별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하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이자 인천앞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강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을 함께 체

결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를 부담, 매년 30.5억 원씩 5년간 152.5억 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1.5억 원 증액해 5년간 7.5억 원 상향 지원한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앞바다 및 서울 한강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은 최근 이슈화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를 20년 전부터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선진 행정사례”라며,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한 예산으로 한강 유입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붙임> 각 업무협약서 전문.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앞바다로 쓰레기 유입을 억제하고 유입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부가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3개 시·도”라 한다)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2001. 4. 11) 정신을 계승하고 공영정신에 바탕을 두고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사업) ①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등으로 하며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단, 어민수매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①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기간 동안 매년 85억원씩 총 42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3개 시·도 분담금액은 사업비에서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58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한다.

제6조(지원) 환경부는 인천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유입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국고 보조율을 광역시 지원비율에 맞도록 노력한다.

제7조(쓰레기 처리사업 분담 사업비 납부)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매년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 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① 인천광역시장은 당해연도 사업집행 실적과 사업비 정산 결과를 매 익년 3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2022년도 사업비부터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분담비율대로 반납 정산을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과 반납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은 국고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 범위까지로 한다.

제9조(용역실시) 협약기간 중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의 비용분담방안과 분담비율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실시 결과 등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제10조(기타협의)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총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 시에는 만원 단위까지 산정(미만은 끊어버림)한다.

2021 년 10 월 15 일

환경부 차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이하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3개 시·도”라 한다)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3개 시·도는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2002.12.27) 정신을 계승하여 한강수계 상·하류 공영 정신에 바탕을 두고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사업) ①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은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의 쓰레기 수거·처리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①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의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기간 동안 매년 30.5억원씩 총 152.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3개 시·도별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국가 재원의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제2항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3개 시·도의 연간분담 금액을 정한다.

제6조(사업비 분담액 납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분담액을 매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집행 실적과 사업비 정산 결과를 매 익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분담비율대로 반납 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용역실시) 협약기간 중 서울시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의 비용분담방안과 분담 비율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실시 결과 등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제9조(기타협의)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총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시에는 만원 단위까지 산정(미만은 끊어 버림) 한다.

2021 년 10 월 15 일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